

세종시 수정 후폭풍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정몽준(MJ) 대표가 18일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여권의 내홍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 전 대표(왼쪽)와 의원총회에 참석 중인 정 대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 전 대표(왼쪽)와 의원총회에 참석 중인 정 대표.

기업 '블랙홀' 세종시 대기업 이어 중소기업까지

세종시에 중소기업 전용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전남지역 경제가 커다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 같은 계획이 구체화할 경우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까지 세종시로 몰릴 수밖에 없는 만큼, 상대적으로 기업 여건이 취약한 광주·전남의 기업유치에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18일 "세종시 132만㎡(40만평) 부지에 첨단·녹색 중소기업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총리실과 기본적인 협의는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국무총리실에 세종시 내 중소기업 전용 녹색단지 조성을 조기 확정해줄 것을 건의했다"며 "세종시 기획단

관이 들어서기로 예정되어 있어 광주·전남에 비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경우 첨단과학산단과 분촌, 송암, 하남산단 등 모두 8개 산업단지에 3천600여 개의 중소기업이 가동되고 있으나, 세종시에 중소기업산단이 조성되면 기업유치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기존업체를 가운데서도 세종시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광주지역 산단의 부지공급가격이 3.3㎡당 60만 원 안팎으로 세종시의 공급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데다, 세종시의 경우 수도권과 가까운 기업정보 교류와 물류가 활발하고 무엇보다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기대된다는 지적 여건의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300~500개 입주 중소기업 조성 광주·전남지역 투자유치 치명타

에서 첨단·녹색단지 내에 '첨단 중소기업 전용 녹색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구·벤처·국제 교류 구역, 대학·타운 등에도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공급되는 부지가격은 3.3㎡당 70~75만 원가량으로, 대기업에 공급되는 가격보다 20~30만 원쯤 저렴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회장은 132만㎡ 부지에 입주 가능한 중소기업 수는 300~500개 사이로, 이미 입주한 대기업 협력사와 첨단·녹색 산업단지 위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그러나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투자유치를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결실물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종시가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부지가격이 광주·전남과 비슷한 수준인데다, 세종시에는 주요 대기업과 협력업체 그리고 대규모 첨단연구·개발기

업 산단의 중소기업 유치가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단순히 부지 공급가격으로만 보면 세종시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공급가가 전부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분양이 진행중인 광양 신금산단의 경우 3.3㎡당 평균 공급가격이 97만원인 것을 제외하면 화순산단 3.3㎡당 38만원, 여수울촌 1산단 3.3㎡당 39만6천원 수준으로 세종시 공급가격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세종시가 정부 지원으로 형성되는 대규모 클러스터인데다, 대기업이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수도권에 가까운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면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세종시에 중소기업 전용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중소기업들이 세종시로만 몰리게 되고, 매년 60여 개씩 광주에 유치되던 중소기업들의 씨가 마르게 된다"며 "특히 광주지역 중소기업들은 대부분이 첨단·클린·녹색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김지우기자 dok2000@

朴-MJ 정면충돌... 與 내분 확산

박근혜 '정몽준 책임론' 초강수 제기 친이-친박 갈등 이어... 당 분열 조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정몽준(MJ) 대표가 18일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여권의 내홍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친이-친박 진영간의 갈등에 이어 박근혜 대표와 정몽준 대표가 반목하면서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분당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전 대표는 18일 국회 본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최근 '미생지신'(尾生之信)이라는 고사를 인용해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해 "불과 얼마 전까지 원안 추진이라는 당론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렇게 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해 책임지실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전 대표는 또 "수정안에 찬성하면 애국이고, 원안을 지지하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고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것이고 판단 오류"라면서 "원안 추진이 나라를 위해 안 되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공약하고 약속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소신이나 생각이 변했다면 판단력의 오류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전 대표의 발언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당론

으로 채택하려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과 경고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수정안 드라이브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메시지도 분석되고 있다.

이에 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발원 방안을 발표한 만큼 당연히 찬성, 반대 토론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면서 "자유로운 면서도 경우에 맞게 찬반 토론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또 "(박 전 대표가) 당 대표라고 해서 정부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말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면 이는 조금 지나친 말씀이 아닌가 싶다"면서 "박 전 대표가 정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처럼 누구든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불필요

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화와 논의자체를 거부하거나 정파적 이해에 치우쳐 국민을 현혹·선동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박 전 대표를 우회 비판한 바 있다.

이처럼 여권의 갈등이 위험수위로 치달으면서 한나라당의 분열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내에선 그동안 금기시됐던 '분당'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면서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이날 홍준표 전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 소신만 중요하고 남의 대다수 소신을 점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독불장군"이라고 박 전 대표를 비판하면서 "서로 토론이 안 된

다면 분당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밝힌 것.

이에 따라 청와대와 친이 주류 측이 더욱 강하게 맞받아 칠 경우, 한나라당 내부의 갈등 수위는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친이 주류 의원들의 모임인 '함께 내일로'는 20일 회동을 갖고 세종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전면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한나라당 내전엔 양 측이 물러설 길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당장 분당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지만 양측의 불신이 너무 깊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분열의 수순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세종시 처리 빨리...” 동상이몽 속도전

정운찬 국무총리와 민주당 등 야권이 세종시 수정안 처리와 관련, 동상이몽의 '속도전'을 주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 총리를 중심으로 한 정부에서는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세종시 수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시간을 끌수록 불리하다는 계산 아래, 속전속결로 정부의 수정안을 부결시킨다는 계산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8일 세종도 정

부중앙청사에서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종시 수정과 관련, "정치적 현실이 여러 어려움을 가져오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잘못하다가는 소모적 논쟁을 통해 사회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좋은 안을 만들기 힘든 정도로 좋은 안을 만들었다고 자부한다"며 "세종시 수정안이 빨리 성사돼 나라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이날 한나라당 서울 강남권 출신 의원들과 비공개 오찬간담회를 갖고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권도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제출되지만 기다리고 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반대에 대한 야권 연대가 탄탄한데다 한나라당 친박 진영의 반대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법안이 제출되는 대로

부결시킨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친박 진영 의원을 포함한 다면 현재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의원 숫자는 180여명에 가까운 상황이라서 정부의 법안이 제출된다면 즉시 부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제출이 늦어질수록 민주당 등 야당의 입지는 좁아질 전망이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정부의 홍보가 더욱 강화되고 한나라당 친이-친박 진영간의

협상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면서 여론을 느낀 여권이 반대 목소리를 낮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 통과를 결국 국민 여론의 흐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총청민심의 향배가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총리 "소모적 논쟁 혼란만 불러" 민주당 "늦춰질수록 여론서 불리"



미래를 위한 선택, 꿈을 향한 도전!

변화의 시대에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책!

김장환 전 교육감이 전하는 교육 희망 보고서

실력 전남교육을 향한 선택과 도전

이 단행본은 책에 전남교육의 과거와 현재의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록과 차이를 넘어서, 수많은 비극과 난관을 헤쳐 온 전남교육의 역사를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만들어야 할 꿈과 희망의 비전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김장환 전 교육감의 인터뷰)

미래에는 단언컨대가 있고 불확실성이 있다. 이책의 시간교류를 과감한 배려로 우리와 함께하고 도전하는 변함 없는 헌신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믿는다. (김장환 전 교육감의 인터뷰)

